

李, 부동산 보유세 직접 언급... 투기 근절 고강도 대책 암시

부동산 투기 '최악의 문제점' 지적
일각선 보유세 인상 신호 해석도
靑 "모든 수단 검토하겠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암시했다. 각종 규제를 동원해 '갖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것이 더 유리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최근엔 보유세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냐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라며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샐틈없이 모든 약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



24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걸려 있다.

/뉴시스

티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청이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준비해달라"며 "모든 약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

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 욕망과 정이가 부딪혀 지금까지 욕망이 이겨왔다"며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사람들이 욕망을 편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뉴욕

과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 보유세 현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제를 건드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자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기사 작성이 고맙다며 각국의 보유세 현황을 소개하는 차원이었던 듯 싶다"며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보유세가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는 점에는 다른 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보유세를 올린다기보다는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앞두고 매물을 유도하려는 심리전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9·7 공급대책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반영돼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에도 시간이 오

래 걸린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스피커'로 나서 시장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로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생각은 현재로서는 '보유세를 인상한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홍 수석은 "5월9일 중과세 조치가 이뤄지고 나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매물이 잠겨 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보유세 언급은 시장 반응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경고이자, 인상 전에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KB금융그룹 | 국민회생금융파트너 |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 퇴직연금 팡팡하게 불어나라

IRP DC DB

**팡팡한 자산 성장을 맛보고 싶다면,
KB증권 연금하세요**

IRP

비대면 계좌 개설하면
평생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펀드 보수 및 유관기관 수수료 별도 발생 가능

+

ETF 리츠 TDF 채권

다양한 투자상품
모바일로 실시간 거래

AI Generated | 투자를 똑똑! 깨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933호(2026.03.05~2027.03.04)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비대면 계좌) HTS 0.014%~0.015%, 모바일 0.119%~0.12%(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미국 주식 수수료는 온라인 기준 0.25%(주후 제비용 발생가능)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화 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점리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한도) 보호됩니다.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IRP 수수료: 연 0.20%~0.25%(단, 비대면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 *DC 수수료: 연 0.20%~0.50% *과세 기준 및 병합 향후 변동 가능 *펀드 보수 및 유관기관 수수료 별도 발생 가능하며, ETF 거래 비용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B증권

스마트폰 제조사 '원가 충격' 보급형 확대 등 라인업 재정비

메모리 급등·물류 리스크 '이중고'
소비자 수요 이동... 전략수정 불가피

메모리 가격 급등과 물류 리스크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 위축이 신제품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판매 둔화 우려로 가격 인상에 신중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가격을 동결할 경우 수익성 저하 압력도 커지는 상황이다. 수요가 플래그십 신제품에서 보급형과 중고·리퍼비시 제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배경이다.

25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2% 감소해 11억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항공 운임과 우회 물류 비용 부담까지 확대되면서 업계는 이번 침체를 단순한 수요 부진인 아니라 공급망 부담이 겹친 구조적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다.

시장 전반의 지표 역시 하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IDC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평균판매가 14% 상승한 523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공급이 서버용으로 집중되면서 소비자용 전자기기 부품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된 결과다. 일반 D램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며 스마트폰 제조 원가 부담이 가중된 점도 반영됐다.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 원가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반도체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으로, D램과

낸드 가격 변동이 전체 제조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다. 최근 고용량 AI 기능 탑재 확대에 따라 메모리 탑재량까지 증가하면서 단말기당 원가 상승폭도 확대되는 추세다.

소비자 행동 변화도 뚜렷하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리권 제도와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품 수명 연장과 재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 및 리퍼비시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약 145조원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제품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제조사들의 판매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고 시장 확대는 제조사들의 가격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제품 가격이 상승할수록 중고·리퍼 제품과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며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군일수록 감가 이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신제품 수요를 일부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부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 대신 사양 조정이나 마케팅 비용 축소를 통해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판매 부진보다 수요 이동이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신제품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는 보급형과 중고 시장으로 분산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가격과 수익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단순 원가 문제를 넘어 제품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분간은 가격 인상과 수요 방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



metro